



수입할어 급증과 사료 값 인상, 소비부진 등 삼중고로 완도 납치양식 어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도군은 납치 소비확대를 위해 '완도납치 & LOVE' 소비전략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농수특산물 중국산 습격·과잉 생산에 고사

판매 부진·값 폭락·신뢰도 추락 '삼중고'

정부·농협, 배 40억 어치 수매후 산지 폐기
수요·공급 관측, 적정생산 구조 구축 시급

보성 녹차와 완도 납치(꽂이), 나주 배 등 일반 명사화 되다시피 한 전남의 대표 특산물들은 최근 수년 사이에 중국산 유입과 과잉 생산, 중국산의 국내산으로 둔갑에 따른 신뢰도 추락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산물 위기 실태=보성 녹차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녹차 재배를 권장하면서 생산량이 급증, 결국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였다.

전남지역 녹차의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능력은 지난 1995년 450개에서 지난 해 2천905개로 6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생산면적(410ha→2천6ha)은 5배, 생산량(376t→2천353t)도 6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남 녹차가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지난 2000년 35.2%에서 2006년 60.5%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최근 제주도와 강원도까지 녹차 생산에 가세하면서 총 생산량이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 이에 따라 보성 녹차 판매량은 최근 1년 사이 200%이나 줄었고, 연

소득도 800억원이나 감소했다.

여기에 2006년부터는 국내 대형 식품회사들이 수천t의 중국산 녹차를 수입하고 있어 상당수 농가들은 관로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납치 생산량의 35~40%(1만4천t)를 차지해 연간 1천400억원대의 판매 실적을 올려왔던 완도 납치 양식어민들도 지난해부터 급격한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kg당 납치 가격은 지난 해 이맘때 1만2천원~1만4천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8천원에 그치고 있다.

박인택(50) 보전수산 전무는 "국내산의 30%에도 못미치는 값싼 중국

산 할어 선호로 가격 하락과 출하가 막히면서 매달 8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사료 값도 올라 매일 쥐야 하는 사료도 3일에 한 번 밖에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 배는 과수원 조성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8만4천t으로 예년에 비해 12%가량 급증한데다 풍작이 겹치면서 배값이 지난 해에 비해 절반 이상 폭락했다. 정부는 과잉 생산 상태인 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협과 함께 40억원 어치가 넘는 배를 사들이 폐기하기로 했다.

고흥 유자도 재고량이 연간 생산량의 절반을 넘기면서 올해 농사는 사실상 망친 셈이다. 고흥의 연간 유자

생산량은 6천여에 달하지만 현재 재고량이 4천t에 육박하고 있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흥지역 유자는 전체의 7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선인 중국과 일본 등이 경기침체로 수입량을 크게 줄임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 1천900여 농가가 422ha를 재배, 연간 1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고흥 유자는 수출선을 뚫지 못할 경우 올해 수십억원의 소득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서해안 조기는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오히려 적자를 보는 어민들이 상당수다. 이는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민들이 잡는 조기가 씨알이 적은 7석 조기(21cm)가 대부분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다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으로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7석 조기 1상자당 지난 해 8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5만원에 그치고 있다.

◇향후 대책=균형잡힌 수요·공급을 이뤄낼 수 있는 적정 생산구조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작목과 관련, 전남도나 해당 시군이 타 지역의 생산동향 등 수요·공급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목을 선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문에 어떤 해에는 생산량이 부족해 많은 소득을 올리다가도 어떤 해에는 과잉생산으로 인건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부 9·1 세제개편안 시행 때

광주·전남 재정 5,024억 줄어 큰 타격

진보신당 분석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감소액이 연간 5천24억원에 달해 광주·전남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1일 중앙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변화 추계'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액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지방교부세 525억7천만원, 부동산교부세 9억7천만원, 교육세와 내국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천123억6천만원 등 총 1천659억원이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남지역도 지방교부세 1천299억 원, 부동산교부세 44억8천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천291억6천만원 등 총 3천365억4천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내 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의 경우 ▲목포 167억3천만원 ▲여수 208억9천만원 ▲순천 311억8천만원 ▲나주 233억5천만원 ▲담양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 살림 거둬내는 정부의 감세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복지 혜택 등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44억8천만원 ▲곡성 137억2천만원 ▲구례 120억9천만원 ▲고흥 240억5천만원 ▲보성 177억9천만원 ▲화순 179억3천만원 ▲장흥 160억9천만원 ▲강진 153억 원 ▲해남 239억5천만원 ▲영암 170억4천만원 ▲무안 159억1천만원 ▲함평 140억6천만원 ▲영광 141억5천만원 ▲장성 143억1천만원 ▲완도 180억7천만원 ▲진도 152억4천만원 ▲신안 198억5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진보신당은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주민세도 감소하게 되는 만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은 볼 보듯 뻔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살림 거둬내는 감세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안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투기 광풍을 조장한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대폭 수정 가능성

최상철 위원장 "각 지역 전략사업 선택·집중"

신재생에너지 싸고 호남·대구·경북 논란 예상

정부가 역점추진하는 '5+2 경제권' 선도산업의 대폭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연구원의 주관으로 대구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21세기 낙동포럼'에서 "선도산업은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 구성한 수준이지 국책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호남권'의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부문과 유사한 '그린에너지 산업'을 '대경권(대구·경북)'에 포함시켜 달라는 영남 지역여론의 수을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역경제권간 사업이 중복될 경우 재원이 분산투자될 수 밖에 없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 창조지역'으로 육성하는 성장 동력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광역경제권 단위에서 선도산업을 제안하면 앞으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선도산업은 참여정부에서도 제안했던 각 지역의 여러 전략사업들을 선택·집중한 것이어서 지역은 무슨 사업을 해서든 안된다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광역개발권 개발과 관련 남해안산업벨트, 동해안에너지산업벨트, 서해안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지역벨트 외에도 내륙녹색성장벨트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강원도의 영월, 정선이나 경북 북부의 영양, 봉화처럼 많이 낙후된 지역들을 벨트로 묶어 특별지원하는 것으로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추진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가칭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선도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전남도, 전북도가 포함된 5+2 경제권 호남권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 광(光) 소재 산업'이며 대경권 사업은 '에너지, 이동통신'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Advertisement for S-MOVILION Grand Open.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ar and a sign that reads 'S-MOVILION Grand Open'. Text in the ad includes '세계의 명차, 이제는 SK를 통해 만나십시오' and '광주 S-MOVILION Grand Open'. At the bottom, there is a phone number: 525-3535, 050-911-3535.